‘미국산 갈비’ 추석 전 공습 예고

■ 정부, 美 쇠고기 수입 요청 검토 착수

‘뼈 허용-30개월 미만’ 조건 협상 가능성 유력

정부가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추석전인 오는 9월께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끝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검역 기술협의에서 양국의 요구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우리의 독자적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미국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이르면 LA갈비 수입 9월께 결정=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청장은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에 따라 위생조건 개정을 검토한다.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의 8단계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양측의 협의 상황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권오규 부총리가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협의 과정이 순조롭게,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8단계까지 9월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뼈 허용, 30개월 미만’ 조건 유력=그러나 권 부총리의 설명대로 1~5단계 서류 작업에서 양측이 속도를 낸다해도, 6단계부터는 새로운 위생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두 나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부위 제한을 없애 뼈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유지하자는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연합뉴스

한미 FTA 쟁점 조항 논란 가열

정부, 적극 해명 진화 나서

정부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대상에 조세정책 포함 여부,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약값·개성공단 등 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자 ‘주요 쟁점별 질의 응답 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배기량 세제포기는 ‘조세 조화’=정부는 어떠한 형태든 배기량 기준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 조세주권 포기가 아닌 ‘조세 조화’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자동차업계도 배기량 기준 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과 상대국에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국제관행’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 세제가 외제 자동차 배척을 목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과거 오랫동안 국내 업체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해 왔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 주장의 타당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협상 성과’=정부는 농산물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실효성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 첫 해 27만t부터 15년차에 35만4천t까지 늘어나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t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높고, 30여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는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므로 농업부문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22만4천t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 실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을 관철한 자체가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섬유업체 현장 실사=섬유부문에서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미국 측의 ‘예고 없는 현장실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상기업이 거부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예고 없는 실사에 직면한 한국 측 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목상의 조항만을 내세웠을 뿐, 미국 측이 원하는 검증을 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제외=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는 왜 협정문상 표현이 부동산 정책 대신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 대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목적상 모두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만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북이 함께 ‘통일 하이킹’ 남북 자전거대회에 참가한 남북 자전거 동호인 250여명이 지난 27일 평양 시내를 나란히 달리고 있다. 이날 대회는 평양~남포간 40㎞ 고속도로를 왕복하며 열렸다. /연합뉴스

“BDA 해결 ‘보장’하면 핵시설 가동중단 이행을”

美, 새 제안·중유 제공도 …北 수용 여부 주목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등을 먼저 이행하고 이럴 경우 중유 5만t 제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미국은 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와코비아 은행 등 미국 금융기관을 중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법률적 조치 마련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현 상황을 북한 측에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순위로 검토한 청산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BDA의 소유형태 변경방안 등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마카오 당국 등이 요구한 BDA 제재 해제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하며 ▲이를 북측이 원하는 형식으로 가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고 ▲대신 2·13 합의 이행이 60일 이행시한을 넘겨서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우선 타개하자는 BDA 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힘내라! 광주경제 3두마차

이종태
경제부 차장

광주경제를 이끌어가는 ‘빅 3’가 휘청거리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해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가 공교롭게도 올 들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 1·4분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게다가 일부 생산라인의 중국이전설, 유동성 위기설까지 흘러나왔다.

삼성광주전자 역시 연초 최고경영자의 ‘생활가전 해외이전설’로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고용감축설에 휘말렸다. 2004년 이후 500여명의 자연감축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해외이전설’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의 경기도 분할이전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세계 5위의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이전을 확정했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지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측은 “중국내에 생산공장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마저 옮겨가면 광주·곡성공장은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입장을 내비쳐 임금협상과 연계한 투쟁을 전개할 경우 여느 해보다 ‘후텁지근한’ 여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빅 3’의 고전은, 고유가에다 원자재가 상승, 환율하락이라는 3중고로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광주제조업 매출의 50%를 웃돌며 수십개월째 수출상승을 주도해온 ‘빅 3’가 흔들리면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수 개의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부분가동에 들어갔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조만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또다른 업체는 지역내 대기업만 보고 납품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적지않아 타지역 대기업에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6월이 오기도 전, ‘사상 최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은 유독 춥다. 임금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의 분위기가 그리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나 금호타이어의 경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섬유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사측과 격렬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발, 올해는 지리한 파업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고 노사가 손을 잡는 ‘따뜻한’ 모습을 봤으면 한다. 대기업들이 매출을 일구고 수출을 견인하며 고용을 창출해내는, 지역발전의 튼실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전 코오롱 노사가 ‘항구 무파업’ 선언을 했다. 경영상태도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 광주·전남지역 산업현장 종사자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jtlee@kwangju.co.kr